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김 병 섭**
안 선 민***
이 수 영****

< 목 차 >	
I. 서 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검토 및 이론적 논의	V. 결 론
III. 연구 설계	

<요 약>

본 연구는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사회경제요인이 개인의 종합적인 행복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의 주장을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정부 청렴도, 중앙·광역·기초 정부 신뢰도, 공공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거시경제적변수를, 종속변수로는 지역주민행복 수준을 선정하여 해당 요인들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환경서비스, 교육/문화 등 서비스, 소방안전 서비스,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국민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 행복을 위해 정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행복, 국민행복, 정부청렴도, 정부신뢰, 공공서비스만족도, 상향 확산이론】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 S1A3A203382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bskimn@snu.ac.k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sunmin9101@snu.ac.kr)

**** 교신 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soo3121@snu.ac.kr)

논문접수일(2015.4.10), 수정일(2015.6.10), 게재확정일(2015.6.16)

I. 서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Frey(2008)의 주장처럼 최근 우리 정부 내에서도 국민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인식 변화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2006년 영국의 White 교수가 작성한 Map of World Happiness 순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2위로 아주 저조한 행복 순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2009년 영국 New Economic Foundation의 Happy Planet Index에서는 68위로, 또한 Columbia 대학교의 Earth Institute가 발표한 2013 World Happiness Report에서는 전 세계 156개 국가 중 41위로 평가되는 등 국민행복 순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이번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를 ‘국민행복’으로 삼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 같은 세부국정과제들을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4). 즉, 국민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공익, 즉 국민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학문분야에 비해 행정학에서는 개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현국·이민아, 2014).

물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개인의 행복 추구에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이슈를 두고 여전히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우창빈(2013: 298)은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개인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그 자신이 선택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국가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통이 대세라고 지적한다. 이와 달리, Lane(2000: 298)은 국민들이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는데, 이에 우창빈(2013: 290)은 행복 추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제시할 필요가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유 온정주의적 개입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거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찬반 의견이 공존하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양극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고려한다면, 이 글은 Layard(2005)가 지적하듯이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민의 삶의 질 혹은

행복 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정책은 사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Costanza et al. 2008, Rossi et al. 2004, 허만형 2014).

그렇다면, 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노력이 실제로 개인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해 대답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민행복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주로 개인이나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치단체 혹은 커뮤니티 단위의 행복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국민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포함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역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국민 행복

철학적 관점에서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Bentham에서부터 시작되었다(Prycker, 2010). 이후로 행복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는데,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은 학문마다 상이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심리학적 견해(Diener, 1984)가 있는 반면, 행복은 주관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회학적 관점도 있다(Veenhoven, 2001). 이렇듯 행복에 대한 견해는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관점에서 나뉘어 상충되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Layard(2005)는 완전정보 상황이라는 고전적 경제학의 가정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취하면서 개인의 선호는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의 비교, 즉 지위 경쟁(status race)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은 안전하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인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감정은 사회적인 부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주장처럼 개인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

부의 역할이 필요해지는 여지가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 제 10조는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¹⁾ 이재승(2008:127)은 다양한 사회권과 함께 행복추구권 또한 적극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본 국민 행복 연구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 행복’은 발전(progress)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나타났다(이승중·오영균, 2013)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강조되었던 산업발전 이후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성장만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소득의 성장세에 비해 행복 수준의 향상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 이례적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뤘던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고 할 수 있으며(구교준, 임재영, 최슬기, 2014; 이재열, 2015 등), 최근에서야 국민의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발전모델에서 국민 중심, 즉 수요자 맞춤형 국정모델을 추구하면서 이를 ‘국민행복 모델’로 명명하였는데(이승중·오영균, 2013),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Bentham이 주장한 ‘가장 좋은 사회(the best society)’란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곳(Layard, 2005:5)’이라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국민이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새로이 눈을 떠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행복에 대한 정의는 사회과학의 모든 개념들이 그렇듯이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Layard(2005)는 행복을 인간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써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선(self-evidently good)이라고 정의했고, 이지은·강민성·이승중(2014)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함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감정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는 지자체에 눈높이를 맞춘 연구이므로 그 맥락에서 최영출(2014)이 정의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적용하고자 한다.

2. 국민행복에 관한 선행연구검토

1) 개인 수준의 연구

국민행복에 관한 개인수준의 연구는 대체로 개인의 인식을 주요 관심변수로 삼고, 공공서

1)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 국민이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즉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승(2008:127)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다양한 사회권을 명시하고 있는 바, 행복추구권 또한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스 만족도와 개인의 삶의 만족에 관해 진행되었다. 이현국, 이민아(2014), 고명철(2013), Dimian & Barbu(2012)는 개별 서비스영역에 대한 성과인식과 개인의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측정했고, Sirgy et al.(2008)은 공공서비스가 지역만족도에, 지역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Dreher & Öhler (2011)의 연구는 정부와 시민의 정치적 성향 간의 일치 여부가 개인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Sirgy et al.(2010)은 지역 만족도와 삶의 질을 측정하고, Frey, Luechinger, & Stutzer(2009)는 테러와 지역 갈등과 같은 부의 공공재(public bads)가 개인의 삶의 만족수준을 낮추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은 물론, 경제적 비용보다 더 큰 심리적 비용이 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2) 국가 수준의 비교 연구

국가수준의 연구는 국가별 정부의 거시적인 특성에 따른 시민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국가수준의 연구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World Bank의 ‘좋은 정부’²⁾의 개념을 이용하여 배정현(2014)은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질은 시민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세부 요인은 국가마다 다른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Ott(2011, 2014)는 정부의 질이 행복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행복의 불균형 정도를 줄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영철(2014)은 사회복지지출예산 비율, 실업예산 비율, 지니계수를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보고, 해당 요인이 국민 행복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Ram(2009)은 145개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정부지출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지만, 이와 달리 Perovic & Golem(2010)은 정부지출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Gainer(2013)는 복지수준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복지수준은 행복수준을 높이지만, 높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행복의 불균형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3) 중범위 수준의 연구

중범위 수준의 연구는 국가 간 도시를 비교하거나 가정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Cogburn & Schneider(2003)는 주정부의 관리 능력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지만, 관리능력이 단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허만형(2014)은 광역정부를 분석단위로 정보화 수준, 지역경제, 복지수준, 문화시설 수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각각이 우울감, 건강수준 인지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Michalos & Zumbo(1999)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의 34,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2) World Bank는 거버넌스 지표를 정부의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 효과성, 규제 의 질, 법의 준수, 부패통제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도서관, 공원, 여가시설, 쓰레기 수거 등 18개의 공공서비스 영역이 지역 주민의 해당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의 결론

아래 <표 1>은 국민행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관심변수와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재배치한 결과인데, 이 표를 통해 기존 연구의 빈자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단위의 경우,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분석단위를 개인(individual), 지역사회(community), 주정부(state), 국가(nation)로 분류하고 있는 Sirgy et al.(2000)의 연구를 토대로 분류하였고, 연구의 관심변수 측면에서는 후술할 Welsch(2009)의 연구를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인 부의 공공재(public goods), 제도적 조건(institutional conditions), 환경적 편의성(environmental amenities), 거시경제적 조건(macro-economic conditions)을 포함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행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분석단위가 개인이거나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은 개개인의 심리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므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고, 국가 간 비교연구는 World Happiness Report나 Happy Planet Index처럼 비교적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선행연구 중 분석단위를 상대적으로 중범위(middle-range)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초단체)나 주정부(광역정부)로 설정한 연구는 비교적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 연구자들이 전국 23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조사하는 것이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고, 행복은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부(특히,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거주지에 따라 대중교통, 편의시설, 녹지조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가 있다는 강인순(2013)의 지적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국민 행복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고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체를 실시한지 25년 이상 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위임사무와 더불어 지방의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 고유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는데, 복지, 생활환경, 문화체육 등 지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이 고유사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허만형, 2014: 231-232) 더더욱 지자체 단위 같은 중범위 수준에서의 국민 행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에서 원용할 예정인 Welsch(2009)가 주민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제시한 네 가지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함 상태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각 연구들이 영향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기

보다는 특정 요인들을 범주별로 연구에 하나씩 포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 (community)는 이웃, 지역, 도시 등으로 두루 사용되어져 왔는데(Sirgy et al., 2000),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기초자치단체로 조작화하여 이 네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선행연구의 관심변수 및 분석단위

	미시 수준(Micro-Level, 개인)	중범위 수준(Middle-Range)		거시 수준(Macro-Level, 국가)
		지역사회 (Community)	주(State)	
부의 공공재 (public bads)	이경태 & 권영주(2010), Frey, Luechinger, & Stutzer (2009) Park & Blenkinsopp(2011)			
제도적 조건 (Institutional conditions)	Dreher & Öhler(2011), Schneider(1975), Widgery(1982)			최영철(2014), Gainer(2013), Perovic & Golem(2010), Ram(2009)
환경의 편의성 (environmental amenities)	고명철(2013), 이현국/이민아(2014), Dimian & Barbu(2012), Gandelman, N., Piani, G., & Ferre, Z. (2012) Sirgy, et al.(2008, 2010), Techatassanasoontorn & Tanvisuth(2008)	Michalos & Zumbo(1999)		
거시경제적 조건 (Macro economic conditions)		Gyourko & Tracy(1991)	허만형(2014), Coggburn & Schneider (2003)	배정현(2014), Ott(2011, 2014)

3. 행복의 형성과정: 상향 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행복을 연결해 주는 이론적인 매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향 확산이론의 시각에서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행복이 개별 영역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하향적 관점을 취해

왔는데(예를 들면, Morgeson & Petrescu, 2011 등),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개별적인 사건이 누적되어 해당 영역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개별 영역의 만족이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향 확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Sirgy et al., 2001).

1970년대 직업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간의 관계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확산(spillover), 보상(compensation), 분할(segmentation)에 관한 이론이 등장하였다(Loscocco, 1991). 확산은 삶의 한 부분에서의 만족이 다른 부분에서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보상은 삶의 각 영역에서의 만족 수준의 균형에 관한 것인데, 한 영역에서 불만족할 때 다른 영역을 통해 이를 보상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직업에 불만족할 때 여가시간에 다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불만족을 보상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분할은 전술한 이론과는 다른 관점을 취하는데, 해당 이론은 개인이 각 영역에서의 만족 수준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시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직업에 불만족할 때 그 감정을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있다(Loscocco, 1991).

Sirgy et al.(2001)은 이상의 논의 중 확산에 대해, 특히 확산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진일보시켰는데, 확산의 유형을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으로, 또한 수직적 확산을 상향 확산과 하향식 확산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 확산(horizontal spillover)은 삶의 각 영역, 즉 직업, 가정, 커뮤니티 등의 분야에서의 만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직적 확산(vertical spillover)은 상위수준의 만족과 하위수준의 만족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데, 상위 수준 만족과 하위 수준 만족 간의 상호영향관계를 상향 혹은 하향식 확산으로 묘사하고 있다. 상향 확산(bottom-up spillover)은 각 하위 영역의 만족이 그보다 상위 수준의 만족, 즉 삶 전반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고,³⁾ 하향식 확산(top-down spillover)은 이와 반대의 개념이다. 즉, 하향식 확산은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이 삶의 각 영역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수평적 확산 연구의 예는 직장에서의 만족이 직장 이외의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Orpen(1978)의 연구가 있고, 하향식 확산에 대한 연구의 예로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이 직장에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Schmitt and Mellon(1980)의 연구가 있다. 또한, 상향 확산에 대한 연구의 예로는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활용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Techatassanasoontorn & Tanvisuth(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Sirgy et al.(2001)이 논의한 확산의 유형 중 상향 확산은 Andrews and Withey(1976)와

3) Sirgy et al.(2001)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이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개인의 행복(personal happiness),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쓰이며, 이들은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밝힌다.

Campbell et al.(1976)이 최초로 언급했다. 이러한 수직적 확산은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에 계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이며, 그 하위 체계로는 가정, 여가생활, 직업 등에 대한 만족인 ‘영역별 만족(domain satisfaction)’이 있다. 그보다 하위에 있는 만족에는 삶의 영역 안에서의 개별 사건에 대한 만족을 뜻하는 ‘개별 영역에서의 정서적 반응(affective responses within life domains)’이 있다. 따라서, 상향 확산이론은 가장 하위체계에서부터 만족의 수준이 축적되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에 이른다 고 상정한다(Sirgy et al, 2010). Sirgy et al.(2000)은 상향 확산이론의 영역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은행, 호텔, 방송국, 사립학교 등에 대한 만족인 기업 관련 서비스의 만족(satisfaction with business-related services), 법원, 소방서, 공립학교, 공립병원 등에 대한 만족 수준인 정부 관련 서비스의 만족(satisfaction with government-related services), 그리고 종교 기관, 청소년, 미혼모 등의 보호시설 등에 관한 만족인 비영리 서비스의 만족(satisfaction with non-profit services)이 그것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향 확산이론의 기본 가정인 ‘개별 영역에 대한 개인의 만족 수준이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기초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개별 영역에서의 개인의 만족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범주의 구체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고,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이란 개인이 느끼는 총체적인 행복감을 의미한다. 상향 확산이론의 관점으로 행복 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 등과 같은 인식 조사를 통해 개인의 정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정부는 개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떤 부문이 개인의 행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행복증진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행복의 관계

상향 확산이론에 의하면, 삶의 개별 영역에 대한 개인의 만족이 가장 상위 체계인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Sirgy et al.(2000)은 상향 확산의 영역이 정부 관련 서비스의 만족, 기업 관련 서비스의 만족, 비영리 서비스의 만족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중 정부의 차원에서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행복의 영향요인을 확인할 것이다. 이 때 정부의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범주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본 연구는 Welsch(2009)가 제시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범주화를 이용하고자 한

다. 단, 본 연구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므로 미시적 차원은 제외하고 거시적 차원의 네 가지 요인 범주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2> Welsch(2009)의 행복요인의 범주화

	차원	내용	세부내용
행복 (happiness)	미시적 차원 (Micro-level)	취업, 임금 등	
	거시적 차원 (Macro-level, societal level)	부의 공공재 (public bads)	부패, 테러리즘, 시민전쟁 등
		제도적 조건 (institutional conditions)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규 준수 등
		환경적 편의성 (environmental amenities)	(환경) 정책 평가 및 만족도
	거시경제적 조건 (macro economic conditions)	실업률, 물가상승률, 성장률 등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Welsch(2009)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happiness)에 관한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이 행복에의 영향요인을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차원으로 분류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미시적 차원의 영향요인에는 개인의 고용상태나 임금 등이 속한다. 반면, 거시적 차원의 영향요인은 사회적 차원의 영향요인이라고도 불리는데, 크게 부의 공공재(public bads), 제도적 조건(institutional conditions), 환경적 편의성(environmental amenities), 그리고 거시경제적 조건(macro-economic conditions)으로 나뉜다고 한다. 부의 공공재의 예로는 부패나 청렴 문제, 테러, 시민전쟁 등의 사건을 들 수 있고, 제도적 조건에는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률 준수 등이 포함되며, 환경적 편의성에는 환경 정책 만족도 혹은 평가 정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적 조건의 예에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Welsch(2009)의 분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라는 분석단위에서 다양한 정부 제공 재화와 서비스의 질(혹은 만족도)과 국민의 행복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위에서 분류한 영향요인 범주별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는 상향 확산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제공하는 개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국민 행복도 증진된다고 가정한다.

첫 째는 부의 공공재(public bads)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예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의

공공재에는 부패, 테러, 전쟁 같은 것이 예로 포함되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부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Frey, Luechinger, & Stutzer(2009)의 연구에 의하면, 테러나 지역 갈등 등과 같은 종류의 위협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비용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한다. 즉, 부의 공공재가 증가할수록 행복이나 삶의 질이 하락한다는 의미이다(Frey et al., 2009). 이러한 지적은 부패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부패 문제는 세금 낭비라는 경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정신적인 비용을 유발하여 스트레스 증가나 삶의 질 하락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Park & Blenkinsopp (2011)은 정부의 부패가 시민의 만족도를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패가 시민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의 청렴도는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이경태 & 권영주, 2010). 부의 공공재가 증가할 때 삶의 질이 하락한다면(Frey et al., 2009), 이와 마찬가지로 부의 공공재의 감소, 즉 정부 청렴도의 증가는 행복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후술하는 것과 같이 정부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패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과 국민 행복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설정한다.

가설 1: 정부의 청렴도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는 제도적 조건(institutional conditions)인데,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규 준수 정도를 의미하는 범주이다. 즉, 제도적 조건은 정부의 다양한 제도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이해 가능한데,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규 준수 정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가장 포괄적인 대리변수(proxy)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에 대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chneider, 1975). Widery(1982)의 연구는 정부와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났고, 백인보다 흑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위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행복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는 환경적 편의성 범주이다. Welsch(2009)는 환경적 편의성(쾌적성)이라는 범주를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 혹은 만족 정도로 조작화 하였는데, 본 연구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한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선호도나 정책 만족도 등으로 조작화하고자 한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너무나 다양하다. 이현국, 이민아(2014)의 경우 차도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관리부터 문화활동시설 제공에 이르기까지 총 24가지 공공서비스의 행복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고, 경찰, 경제활성화, 교육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개인의 행복수준이 높음을 증명하였다. 반면 고명철(2013)은 가로등이나 도로 관리부터 노인 혹은 청소년 복지까지 총 12개 공공서비스를 도로유지서비스, 여가서비스, 공공안전서비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Dimian & Barbu(2012)는 출산율감소와 노동인구의 감소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와 노인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해당 요인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활용이 삶의 질을 증대시킴을 증명하는 연구(Techatassanasoontorn & Tanvisuth, 2008), 전기, 수도 등의 기본적인 공공재의 제공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Gandelman, Piani, & Ferre, 2012), 공공서비스 등의 개별적 요인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Sirgy et al., 2010) 등이 존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국민 행복이나 삶의 질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국민행복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설 3: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 범주는 거시경제적 요인(macro economic conditions)인데,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허만형(2014)은 지방정부의 삶의 질에 관한 영향요인 중 지역 경제에 관한 독립변수로서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정하였고, 행정·재정에 관한 독립변수로서 재정자립도와 공무원 수 등을 선정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은 스트레스 인지율을 줄이고, 우울감 경험율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erovic & Golem(2010)은 거시경제요인으로서 물가상승률, 실업률, 정부지출 등을 선정하여 정부지출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경제적 요인 또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변수가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선정하였다.

가설 4: 거시경제적 요인은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3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 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삶의 질과 정부역할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다. 해당 연구의 표본은 201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준거하여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하여 할당표본추출방법(quota sampling)을 통해 선정한 총 21,050명에 대해 한국갤럽이 RDD(Random Digit Dialing) 방법으로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가구채택률을 감안해 오후 2~6시 동안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시행되고, 저녁 6~9시에는 가구 유선전화를 이용해 시행되었다. 전화면접은 응답자가 전화를 통해 접촉할 수 있고, 설문에 기꺼이 응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탈락한 응답자들에 의해 편의가 발생하여 편향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김병섭, 200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화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응답자에 포함시키는 방법인 RDD는 표본추출 과정에서의 편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휴대폰 번호로는 지역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응답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라는 개방형 형태의 질문을 이용하였다. 지역으로 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 청렴도 변수와 거시경제 변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개인이나 국가 간 행복연구에 비해 중범위 수준에 해당하는 기초자치체 단위의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연구 자료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분석하였다.⁴⁾ 즉, 우리나라 229개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가 분석 단위이며, 각 질문 문항의 수치를 평균한 것이 각 기초자치단체의 관측치가 된다. 수집

4) 개인에게 수집된 자료를 지자체 단위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개인 차원의 연구와는 별도로 지자체 차원의 연구가 차별성을 갖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 수준에서 수집되어 지자체 단위로 환원된 여덟 가지 변수(행복, 신뢰도 3개, 공공서비스 4개)에 대해 지자체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유의수준 .10에서 모두 기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자체 수준의 변수도 지자체 간에 서로 차별성을 가지므로 독립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된 데이터는 stata 13.1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2. 변수측정

1) 독립변수의 측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Welsch(2009)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으로서 부의 공공재, 제도적 조건, 환경적 편의성, 거시경제적 조건을 제시했는데, 본 연구는 이 네 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조작화 하였다.

<표 3> 조작적 정의

Welsch (2009)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부의 공공재	테러, 시민전쟁, 부패 등	청렴도	
제도적 조건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률 준수 등	신뢰도	기초자치단체 신뢰도 광역정부 신뢰도 중앙정부 신뢰도
환경적 편의성	정책 선호도, 정책 평가 등	공공서비스 만족도	복지서비스 만족도 생활환경시설 만족도 교육·체육·문화·예술서비스 만족도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
거시경제적 조건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재정자주도, 세출액, 사업체 수	

첫째, 부의 공공재는 부패 변수에 초점을 두고 부패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로 조작화 하였다. 청렴도는 부의 공공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자료를 이용하며, 부정 부패의 발생이나 민원인에 대한 금품요구 등의 사건이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청렴도의 수치는 낮아진다. 청렴도는 1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청렴도가 높을수록 부의 공공재 수준이 낮고, 청렴도가 낮을수록 부의 공공재 수준이 높은 것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3).

둘째, 제도적 조건은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부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Welsch, 2009). 본 연구는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법규 준수 정도와 같은 제도적 조건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서베이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신뢰수준을 각각 측정하였는데, 각 단위 정부의 신뢰도에 대해 ‘귀하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 질

문에 관한 모든 대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설문문항에 대한 대답은 ‘매우 신뢰’는 5점으로, ‘전혀 신뢰하지 않음’은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앞서 설명한대로 본 연구에서 환경적 편의성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 조작화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와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덜한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와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사무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고 판단하였고, 설문에서는 응답자 본인이 속한 기초지자체의 공공서비스가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귀하가 사시는 ○○구(시/군)의 다음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통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네 가지 공공서비스 만족도 중 첫 번째 영역은 복지서비스 만족도이다. 이 복지서비스에는 사회복지 시설 만족도와 보육여건 만족도가 포함되며, 두 문항 간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245로 나타났다. 두 번째 영역은 생활환경시설 만족도인데, 쓰레기 수거 및 거리 청소상태 만족도, 자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도로상태 만족도, 상하수도 서비스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해당 영역에 속하는 다섯 문항 간의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142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공공서비스 영역은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만족도이다. 이 공공서비스에는 공공도서관 만족도, 문화활동 여건 만족도, 공원 및 여가시설 만족도, 초·중·고 교육여건 만족도가 포함되며,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0.7921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공공서비스 영역은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이다. 해당 영역은 119소방방재 서비스 만족도의 단일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에서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둘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문항들의 응답 평균을 측정치로 이용하였다. 공공서비스 만족도 질문에 관한 모든 대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설문문항에 대한 대답은 ‘매우 신뢰’는 5점으로, ‘전혀 신뢰하지 않음’은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거시경제적 조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제활동과 재정능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자주도, 세출액, 사업체 수로 구성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산업과 고용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므로(조상필, 1995),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들이 재정자립도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허만형, 2014), 본 연구는 재정자주도 변수를 선택하였는데,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뿐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재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입 대비

자체재원의 비율만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재원을 포괄하지 않아 진정한 자치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으며(배인명, 2000), 재정자주도는 해당 정부의 자주적인 지출능력을 의미하므로(주만수, 2014) 재정자주도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대표하기 위해 더 적절한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세출액은 지자체가 1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박응격, 2012:405),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시경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요인 중 지역경제활동에 관한 변수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업체 수를 선정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사업체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체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부흥에 관한 노력을 보여주는 변수로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변수들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2)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의 행복으로, 국민의 행복 정도는 ‘귀하는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단일 질문을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행복이라는 질문을 여러 항목으로 분류하였을 때, 어떤 항목으로 질문하느냐의 가치관 문제가 있고, 이를 행복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나타낼 때에도 가중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예를 들면, Widgery, 1982; Michalos & Zumbo, 1999; Frey, et al, 2009; 이현국·이민아, 2014)도 행복이나 삶의 만족 등에 대해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행복에 대한 문항 또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매우 행복’은 5점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음’은 1점으로 점수화되었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결과

아래 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은 정규분포평균형태를 띠지 않아 자연로그(ln)를 취했는데, 평균이 1.3, 최솟값이 1.17이며 최댓값은 1.39로 적은 수준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청렴도 지수는 평균이 7.63, 표준편차는 0.43이다.⁵⁾ 각 단위정부 신뢰도는 중앙정부의 신뢰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중앙정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이 대체로 낮으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대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네 가지 범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중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를 제외한 세 가지 만족도는 개별 문항의 값을 표준화하여 더한 값을 변수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각 변수의 평균은 0이 되며, 표준편차는 각각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0.89, 생활환경서비스 만족도가 0.68,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만족도가 0.78로 나타났다.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 또한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평균이 1.53, 표준편차가 0.03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조건으로 선정된 변수들은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의 편차를 보이고 있었는데, 도시별 경제적, 행정적 특성에 따라 각 지표의 값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재정자주도, 세출액, 사업체 수의 왜도(skewness)는 각각 -0.698, 2.574, 6.728로, 이는 기초자치단체별 격차가 크고 정규분포 형태를 띠지 않음을 의미하여, 이는 곧 OLS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자연로그(ln)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⁶⁾

<표 4> 기술통계결과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행복(ln)	229	1.3009	0.0333	1.1747	1.3913
부의 공공재	청렴도지수	224	7.6254	0.4254	6.1000	8.4900
제도적 조건	기초단체 신뢰도	229	3.5323	0.1830	2.9653	3.9537
	광역단체 신뢰도	229	3.3583	0.1642	2.7844	3.9221
	중앙정부 신뢰도	229	2.9495	0.3140	2.2548	3.8417
환경의 편의성	복지서비스 만족도	229	0	0.8854	-2.4741	3.0257
	생활환경서비스 만족도	229	0	0.6831	-2.5826	2.2633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만족도	229	0	0.7848	-2.4459	3.1599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ln)	229	1.5327	0.0303	1.4418	1.6214
거시 경제 조건	재정자주도(ln, %)	227	4.1146	0.1930	3.4965	4.5196
	세출액(ln, 천억)	226	1.2291	0.5306	-0.0490	3.0337
	사업체수(ln, 개소)	227	4.2560	0.2783	3.7448	6.1031

2. 회귀분석 결과

아래 표는 네 가지 범주의 거시 사회경제적 요인과 국민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 5) 청렴도의 결측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해당연도에 경상북도 예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도 제주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청렴도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 6) 거시경제적 조건의 결측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세출액은 앞의 두 도시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Welsch(2009)의 분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환경적 편의성의 일부와 거시경제조건의 일부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다른 영역, 특히 정부 신뢰도나 청렴도는 국민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통계적 분석 결과)

분류	종속변수(국민행복)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값	표준회귀계수
부의 공공재	청렴지수	0.00257	0.00565	0.45	0.650	0.03368
제도적 조건	기초단체신뢰	0.01535	0.01796	0.85	0.394	0.08563
	광역단체신뢰	-0.00040	0.02059	-0.02	0.984	-0.00194
	중앙정부신뢰	0.00551	0.00831	0.66	0.508	0.05236
환경적 편의성	복지서비스 만족도	-0.00008	0.00398	-0.02	0.984	-0.00212
	생활환경시설 만족도	0.00896	0.00526	1.71	0.090 *	0.18847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만족도	0.00713	0.00341	2.09	0.037 **	0.17383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ln)	0.21349	0.09397	2.27	0.024 **	0.19668
거시 경제 조건	재정자주도(ln, %)	0.02094	0.01211	1.73	0.085 *	0.12495
	세출액(ln, 천억원)	0.00210	0.00519	0.41	0.686	0.03343
	사업체수(ln,개소)	-0.00646	0.00740	-0.87	0.384	-0.05585
	_cons	0.82397	0.19014	4.33	0	.

N=222, F(11, 210)=3.09***, R²=.1466

(* p<.1, ** p<.05, *** p<.001)

환경적 편의성 영역에 속한 공공서비스 만족도 변수 중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환경시설 만족도,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만족도,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로 분석되었다. 생활환경시설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국민 행복은 0.8% 정도 증가하고,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행복은 0.7% 정도 증가하며,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가 1% 증가할 때 행복은 0.2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방안전서비스는 표준회귀계수가 약 0.2로 모든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환경시설 만족도로 0.19의 영향력을, 교육·체육·문화·예술

7)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robust 표준오차 방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는데, 해당 방법은 정규분포와 동분산성, 지나치게 큰 잔차 등의 본래의 회귀분석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Bruin. J, 2006). 해당 방법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OLS의 회귀계수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절한 연구모형으로 보여진다. 또한, VIF 값이 평균 1.85(최저 1.17 ~ 최고 2.81)로 조사되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비스 만족도는 0.17의 영향력을 행복에 각각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편의성 영역에서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공공서비스 중 유일하게 국민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서비스였다. 2005년부터 지방사무로 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대응력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예상(김병수, 이곤수 & 조덕호, 2008:88)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에는 재정압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복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김미혜, 정진경, 2003 등)가 동시에 존재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복지서비스는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복지사업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는데, 2012년도부터 0~2세 무상보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나(황옥경, 2013: 82), 부족한 재정 문제와 재정자립도의 하락 등이 빈번하게 거론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2015. 5. 12)는 점 등을 불안정성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소방안전서비스만족도가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현 정부가 국민행복 및 안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난 해 세월호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지은, 강민성·이승중(2014)의 연구에서 위험인식이 개인의 행복감을 낮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은 위험할수록 덜 행복하다고 느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소방안전서비스에 만족할수록 행복감을 더 느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임현진 외(1997)의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 ‘과거의 안전사고 경험’과 ‘미래의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있을수록 삶의 질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Layard(2005)가 행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은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었다. 현대사회에서 발전이 증대된 만큼 개인의 주변에서 위험요소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때에 정부의 역할이 재조명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기이론에서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전에 대한 욕구는 매슬로우(Maslow)가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욕구이므로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거시경제조건 중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재정자주도였다. 재정자주도가 1% 증가할 때 행복은 0.0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회귀계수는 0.12로, 환경적 편의성의 세 변수 다음으로 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필(1995:124)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산업입지, 고용촉진, 민간투자 유도 등의 기능을 하여 지역 발전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지방의 세입 중 자체수입이 크면 재정의 자율적인 활용성이 커질 것이고,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의 도움이 크면 자체수입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충 가능한 재정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소홀했던 국민의 행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인식에서 시작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기관의 청렴도, 각 단위정부기관의 신뢰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거시적 경제조건 중 어떠한 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향 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의 관점에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중 생활환경시설, 교육·체육·문화·예술 서비스, 소방안전서비스 만족도와 거시 경제변수 중 재정자주도가 국민의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확산이론은 개별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행복에 연결됨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거시적 사회경제변수 중 기초지자체가 제공하는 세 부문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국민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행복을 종속변수로 시행했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정부 신뢰도나 공공서비스 등의 특정 영역만을 독립변수로 한정하여 연구를 했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정부의 종합적인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면, 본 연구는 Welsch(2009)의 연구를 분석틀로 선정하여 행복에 관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여러 변수들을 독립변수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정부의 청렴도와 신뢰도에 관한 것일 것이다. 청렴도와 신뢰도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Park & Blenkinsopp, 2011; Widgerly, 1982)은 이 변수들이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와 같이 경쟁하는 다른 영향요인들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해보니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청렴도 및 신뢰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공공서비스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간접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정부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국민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이므로 특히 기초 지자체 정부는 청렴도와 신뢰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라는 중범위 수준을 분석단위로 선정하여 정부의 청렴도 및 신뢰도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같은 요인부터 사업체수, 재정자주도와 같은 요인까지를 영향요인으로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국민행복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기초지자체라는 중범위 수준에서의 분석단위 선정은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서비스 제공 단위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행복에 대한 기초 지자체 정부의 향후 역할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학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중앙정부 만큼의 자율성은 가지지 못해서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인정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 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 지자체도 지역의 국민 행복을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인순. (2013). 생활만족도를 통해서 본 여성친화도시: 창원시 사례. 인문논총, 32(단일호), 247-278.
- 고명철. (2013). 일반논문: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상향확산식 접근을 토대로. 한국행정학보, 47(2), 1-30.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일반논문: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국무조정실. (2014). 국정과제
- 국민권익위원회. (2013).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매뉴얼
- 김미혜·정진경. (2003).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9(1), 1-21.
- 김병규·이근수·조덕호. (2008).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메커니즘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87-101.
- 김병섭. (2008). 편견과 오류 줄이기: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서울: 법문사.
- 박응격. (2012). 현대 지방자치론. 서울: 신조사.
- 배인명. (2000). 지방정부 자치재정력의 지방세출구조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행정학보, 34(2), 161-177.
- 배정현. (2014). 일반논문: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247-270.
- 우창빈. (2013). 일반논문: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

- 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이경태·권영주. (2010).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7(1), 97-132.
- 이승중·오영균. (2013). 국민행복과 정부 3.0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이재승. (2008). 일반: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민주법학, 38(단일호), 99-135.
-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2), 3-29.
- 이지은·강민성·이승중.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이현국·이민아. (2014). 일반논문: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48(2), 293-315.
- 임현진·이재열·박광민·설동훈. (1997). 신체적·심리적 안전과 삶의 질. 한국인구학, 20(1), 161-199.
- 조상필. (1995). 논문: 우리나라 지역발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7(1), 119-134.
- 주만수. (2014).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경제학연구, 62(3), 119-145.
- 최열·이성호·김지현. (2001). 대도시 삶의질과 토지이용간의 상관분석. 국토계획, 36(4), 113-127.
- 최영출. (2014). 사회정책적 요인이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OECD 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8(1), 1-22.
- 허만형. (2014). 지방정부의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8(3), 231-254.
- 황옥경. (2013). 영아 무상보육 정책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81-100.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 Bruin, J. 2006. newtest: command to compute new test. UCLA: Statistical Consulting Group.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 Cogburn, J. D., & Schneider, S. K.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government performance and stat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12), 1337-1354.
- Constanza, R., Fisher, B., Ali, S., Beer, C., Bond, L., Boumans, R., ... & Snapp, R. (2008). An integrative approach to quality of life measurement. Research, and Policy.[Online], 1.
- De Prycker, V. (2010). Happiness on the political agenda? PROS and C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5), 585-60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75.
- Dimian, G. C., & Barbu, A. (2012). Public services—key factor to quality of life. Management & Marketing, 7(1).
- Dreher, A., & Öhler, H. (2011). Does government ideology affect personal happiness? A test. Economics Letters, 111(2), 161-165.
- Frey, B. S. (2008).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MIT Press Books, 1.

- Frey, B. S., Luechinger, S., & Stutzer, A. (2009). The life satisfaction approach to valuing public goods: The case of terrorism. *Public Choice*, 138(3-4), 317-345.
- Gainer, M. (2013). Assessing Happiness Inequality in the Welfare State: Self-Reported Happiness and the Rawlsian Difference Princi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4(2), 453-464.
- Gandelman, N., Piani, G., & Ferre, Z. (2012). Neighborhood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3), 547-563.
- Gyourko, J., & Tracy, J. (1991). The structure of local public finance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4-806.
- Lane, R. E. (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market democracies*. Yale University Press.
-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orm a New Science*. London: Allen Lane.
- Loscocco, K. A., & Roschelle, A. R. (1991). Influences on the quality of work and nonwork life: Two decades in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2), 182-225.
- Michalos, A. C., & Zumbo, B. D. (1999). Public services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8(2), 125-157.
- Morgeson, F. V., & Petrescu, C. (2011). Do they all perform alike? An examination of perceived performance, citizen satisfaction and trust with US federal agencie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7(3), 451-479.
- Orpen, C. (1978). Work and Nonwork Satisfaction: A Causal-Correlatio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3(4), 530.
- Ott, J. C. (2011). Government and happiness in 130 nations: Good governance fosters higher level and more equa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1), 3-22.
- Ott, J. C. (2014).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2580-2587.
- Park, H., & Blenkinsopp, J. (2011). The roles of transparency and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citizen satisfac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7(2), 254-274.
- Perovic, L. M., & Golem, S. (2010). Investigating Macroeconomic Determinants of Happiness in Transition Countries. *Eastern European Economics*, 48(4), 59-75.
- Ram, R. (2009). Government spending and happiness of the population: additional evidence from large cross-country samples. *Public Choice*, 138(3-4), 483-490.
- Rossi, P. H., Freeman, H. E., & Lipsey, H. E. (1989). *Evaluation: a system approach*.
- Schmitt, N., & Mellon, P. M. (1980). Life and job satisfaction: Is the job centr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1), 51-58.
- Schneider, M. (1975). The quality of life in large American cities: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 495-509.
- Sirgy, M. J., Rahtz, D. R., Cicic, M., & Underwood, R. (2000). A method for assessing residents' satisfaction

- with community-based services: a quality-of-life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9(3), 279-316.
- Sirgy, M. J., Efraty, D., Siegel, P., & Lee, D. J. (2001). A new measure of quality of work life (QWL) based on need satisfaction and spillover theo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3), 241-302.
- Sirgy, M. J., Gao, T., & Young, R. F. (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 (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2), 81-105.
- Sirgy, M. J., Widgery, R. N., Lee, D. J., & Grace, B. Y. (2010). Developing a measure of community well-being based on perceptions of impact in various life domai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2), 295-311.
- Techatassanasoontorn, A. A., & Tanvisuth, A. (2008). The Bottom-up and Horizontal Spillovers of Quality of Life from Continued ICT Use: The Case of Community Technology Centers.
- Veenhoven, R. (2001). Quality-of-life and happiness: Not quite the same.
- Welsch, H. (2009). Implications of happiness research for environmental economics. *Ecological Economics*, 68(11), 2735-2742.
- Widgery, R. N. (1982).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urban life: A predictive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1), 37-48.
- 매일경제, “금고 바닥 난 서울시 자치구…절반이 재정자립도 30%미만”, 2015. 5. 12.

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cro Socioeconomic Factors on Public Happiness: A Study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Byong-Seob Kim, Sunmin An and Soo-Young Lee

This research intend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acro-socioeconomic factors on public happiness. A bottom-up spillover theory that supposes that each socioeconomic factor affects individual overall happiness is adopted to support this idea. Local government was selected as the unit of analysis, and OLS regression was used while choosing probity of government, trust of central·metropolitan·local government, satisfaction with several public services, and macro economic condi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average individual happiness as the dependent variable. When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education·sport s·culture·art service and safety, and ratio of financial independence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public happines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s worthwhile in that the result proposes the empirical solution of what government should do for public happiness, and provides guidance for e local government role.

【Keywords: Happiness, Public happiness, Probity of government, trust of government, Public service satisfaction, bottom-up spillover theory】